

제144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후쿠시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 포토 저널리스트가 본 원자력발전 지진재해현장 -

도요다 나옴(豊田 直巳) (포토 저널리스트)

도요다 나옴 기자는 1991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 피해현장을 취재하며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방사능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목격한 후 방사능과 관련한 문제를 탐사 보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진재 이후 지난 1년간 재해 지역, 특히 방사능 오염지역을 심층 취재했다. 그는 본 강연회에서 “후쿠시마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쓰나미에 위협받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동일본대진재와 거대한 쓰나미는 막을 수 없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긴박했던 취재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했다.

도요다 기자와 취재팀은 사고 직후 원전으로부터 23킬로미터 떨어진 한 민가에서 시간당 500 마이크로시벨트의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이것은 당시 일본정부가 정한 1년간 방사선량 허용 기준치인 30마이크로시벨트(이후 1000마이크로시벨트로 완화됨)를 뛰어넘는 양이지만 주민은 방사선량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피폭을 당하고 있었다. 인근의 한 병원은 취재진이 준비한 방사선 측정기의 측정한계치를 뛰어넘는 방사선량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원전사고로 말미암은 방사선 피해 상황은 주요 언론과 일본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도요다 기자 등의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겨우 전해지는 정도였다. 그 후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방사선량 수치를 발표했으나 자세한 정보까지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도요다 기자는 당시 후쿠시마 관청과 수상관저에 다양한 정보가 취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정보는 은폐되었고 원전 인근의 주민과 지진 피해 주민이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피난하는 일도 발생했다. 체르노빌 사고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원전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진입을 금지한 반면, 일본은 똑 같은 상황에서 주민이 모두 원전 인근 지역에 남아있었다. 부족한 정보 탓에 취재팀에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를 물어오는 사람이 허다할 정도였다. 심지어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문의를 초청하여 오염 사실을 축소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강연회를 여는 마을도 있었다. 이러한 강연회는 4월까지 계속되었고 이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피난 권고가 내려지기까지 그대로 피폭 당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은 지진손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가설주택에 피난했고 원전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복구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다. 2011년 겨울, 일본정부는 한 마을당 3240억엔을 투자하여 20년에 걸쳐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요다 기자는 방사능 물질로 뒤덮인 지역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며 현 일본 국가 예산의 20배, 내지는 30배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도요다 기자는 담담한 어조로 원전 인근 지역의 상황을 소개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정보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번 강연은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사고 인근 지역의 1차 정보와 취재를 통해 드러난 피해 현실을 알려 참석자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단순히 일본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 또한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고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의응답>

문 :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세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정작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탈원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답 : 아마 일본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탈원전 운동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 :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서면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의 원전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역주민도 있다. 이렇듯 원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민이 일본에 많지 않은가?

답 : 지금은 원전에 의존해서 살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탈원전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원전건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원전건설과 관련해서 이제는 경제문제에서 위험성 문제로 시프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지방정부에서 원전유치를 하고 싶어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문 :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에서 그린비즈니스 등으로 일본 내 전력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가?

답 : 경제산업성 에다노대신의 발표는 그런 방향으로 전력 체제의 변화를 꾀하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이러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남아있다.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스스로 그린비즈니스로 나아가려는 곳도 있고 민주당, 자민당 내에 아직도 원전 긍정파가 많다. 현시점에서 정말 탈원전이 이루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